

轉換期에 선 韓日關係와 對日技術接近方案

尹 文 涉<sup>1)</sup>

## I. 머리말

한일 기술 경제 관계는 영국간의 경제 발전 단계와 기술 수준의 현저한 격차로 인해 일방적인 의존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기본 관계는 크게 보아 전후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탈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는 한일관계도 전환기적 국면으로 몰고 있다. 대일 기술 경제 의존 문제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국 차원만의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기술·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살펴봐야 할 시점에 있다. 본 고에서는 세계 질서의 변화의 본질이 기술 요인을 둘러싼 국가간 지역간의 역동적인 경쟁과 협력이라는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기존의 대일 기술 협력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쪽만의 일방적인 논리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는 한일간 공존 논리 속에서 대일 기술 접근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科學技術을 둘러싼 世界環境變化와 轉換期的 韓日關係

### 가. 國際技術經濟 環境의 變化

미소 양국이 주도했던 냉전 체제의 마감으로 탈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 종전에는 0년과 군사력이 세계 질서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력, 기술력이 새로운 국가간의 질서를 결정하는 이른바 기술·경제 전쟁의 시대로 변천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의 핵심 요소인 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과 마찰 그리고 알력이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의 국제 관계는 이념과 군사적 안보상의 이해 관계를 대신하여 경제력, 기술력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될 것이며 세계화의 진전과 기업간의 기술 동맹 등 국가간, 기업간의 이합 집산이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즉 다수의 기업 혹은 국가가 상호 보완적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함으로써 여타 기업이나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적 테두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공동체의 형성이 EC를 시발로 해서 각 지역이 번져 나갈 것이며, 동시에 기업의 생산 및 기술 개발의 세계화도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경쟁과 협력, 이를 위한 지역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전개될 것이며, 기술이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협력어도 참여할 수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 나. 轉換期로서의 韓日 關係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일 관계도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래 한일간의 기본 관계는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제를 기반으로 미·일·한과 소·중·북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 짜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미국에 의해 일본의 공업화를 위한 후방 기지로 편입되었고 국내의 저임금 노동과 미국의 개방된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의 기술-설비-부품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제 시스템 자체는 냉전 구도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4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달라졌다. 소련 체제의 붕괴, 한·중, 한·러 관계의 회복과 남북한 관계의 변화, 북한·일본의 접근 그리고 미일간 마찰의 심화 등이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달라진 다각적 국제 구도 속에서 한일간 기본 관계의 전환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국내 저임금 노동력과 고갈. 미국 시장의 포화 상태와 제3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특히 심각한 대일 무역 역조 심화 등으로 지금과 같은 의존적 한일 경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한편 일본은 장기적 고도 성장에 따른 국제적 마찰을 제거하지 않으면 세계 속의 보편 국가 혹은 진정한 선진 국가로 진입·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한계와 일본의 한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구조 개편 내지 구조 조정을 수행할 필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 내의 경제적 사정과 일본 내의 경제 사정 그리고 한일 관계를 규정한 국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사정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것은 20세기 전반기의 한일 관계나 20세기 후반기의 한일 관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21세기의 한일 관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 III . 韓日 技術 協力の 現況과 技術

#### 摩擦의 原因

##### 가. 韓日 技術協力の 現況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술 협력 형태는 주로 기술 도입 계약, 일본 기업의 직접 투자,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중간재의 도입 및 인적 유대 관계를 통한 정보 교류 등에 의한 것이었다. 첫째 기술 도입의 경우 '62년부터 '91년까지 누계로 3813건, 우리 나라 총 기술 도입 건수의 50.7%, 지불 대가 기준으로는 약 20억 달러로서 전체의 31.3%를 차지한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최대 기술 협력 상대국임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전무하며, 대한 기술 수출에 있어서는 '89년 총 3300억 엔 중 11.6%인 385억 엔을 수출하였다. 둘째, 일본의 대한 직접 투자 실적은 '91년 6월까지 누계가 약40억 달러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총 외국인 직접 투자의 43.6%에 해당된다. 셋째로 기술이 체화된 기계류·부품의 수입 현황을 보면 '90년 약 140억 달러였다. 우리 나라는 기계류·부품 전체 수요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율이 약 50%이다. 특히 고품질, 고성능 부품·소재는 70~100%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 나라의 최대 기술 공급원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협력을 기술 격차로 인해 우리 나라가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은 대일 무역 역조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나라가 다외 지향적 가공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 나. 技術摩擦에 대한 相互視覺 差異

한·일 양국간에는 무역 불균형과 기술 이전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정부간, 기업간, 전문가간, 메스컴간)에서 논의가 거듭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논의 보다는 오히려 상호간의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해 관계와 감정이 서로 뒤얽혀 있는 관계로 좀처럼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양국간의 경제 관계는 향후 「무역의 확대 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하는데 있어서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의견에 큰 차이를 보여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기술 마찰을 야기시키는 몇 가지 측면에서의 시각

<표 1> 한·일 양국의 기술 협력을 보는 시각차이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활용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의 중간에서 상호보완적 발전 및 동반자적 역할</li> <li>• 아시아에서 일본의 패권주의 오해를 풀어 줄 수 있는 중간 역할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을 축으로 한 주변적 발전 및 하청 기지로서의 역할</li> <li>• 아시아에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경제 강국이므로 한국과 일본에 손잡으면 타아시아 국가들이 경제</li> <li>•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와 동일한 관계 지원 필요</li> </ul>
민간 기술 이전의 부진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조정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li> <li>• 부매량 효과를 우려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이전 기피</li> <li>• 자체 개발한 경우 덤핑 등으로 방해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기업간의 문제이며, 정부간에 사함이 아님.</li> <li>• 당장 일본 기업과 경쟁할 기술은 줄 수 없음.</li> <li>• 기술을 주어도 대만과 달리 고마와 하지 않으며, 저평가함.</li> <li>• 기술 이전 환경 열악 (계약 사항 불이행, 정부의 과도 개입 등)</li> </ul>
기술 이전 요구 기술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기술</li> <li>• package화된 체계적인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기술보다는 생산 기술이 문제</li> <li>• 일본의 생산기술은 100% 매뉴얼화하기 힘들(기술+사람+조직임).</li> <li>• 꼭 필요한 기술을 구체화하지 않는 등 수용 태세 미흡</li> </ul>
문화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인의 양면성 비판 (한국인의 경원 의식)</li> <li>• 일제의 피해에 대한 사죄 노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의 과소비, 근로 의욕 부족</li> <li>• 일본 시장 진출 노력 부족</li> <li>• 예의와 신의 부족 등</li> </ul>

차이를 보면 <표1>과 같다.

한일간의 기술 이전의 문제를 한국 측에서는 다분히 당위론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측에서는 현실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당위론적 접근은 기술 이전의 문제를 흔히 비기술적 근거, 가령 윤리적인 정당성이나 역사적인 전망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정부의 제도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그 반면에 현실적인 접근은 기술 이전의 문제를 기술 그 자체의 논리로서 철저히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상대방의 비현실적 접근 자세를 비판하고 정부의 제도적인 역할보다는 기업의 영업적 차원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갈등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일본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유인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일 기술 접근의 기본 골격은 양국 정부가 개입하여 단기간에 균형을 이루자는 비경쟁 논리에 의한 기술 공여 요구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역사적·정치적 정당성을 떠나 약자의 논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기적인 전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국제화의 조류에 적합한 국내기술 이전 환경의 개선, 세계 경제의 다극화로 인한 기술 공급자의 경쟁 관계 활용, 일본 기업간의 경쟁 심화 구도의 활용 및 세계적으로 비판과 압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기술·경제적 내셔널리즘의 재조정 과정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세계 기술·

경제 환경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적 자산인 우리의 기술 능력의 배양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의 대일 기술 접근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V. 對日技術接近 方案

##### 가. 정부의 대일 기술 협력상 체제의 정비

정부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는 포괄적이며 무차별적인 느낌을 일본측에 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요구해오 할 기술 이전과 민간 차원에서 요구해야 할 기술 이전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화의 창구로 삼아 환경 관련 기술이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술등 인류 공통의 기술 과제와 관련하여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현재 우리에게 폐쇄되어 있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나 국제 연구 협력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OECD 및 미국이 주장하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외국의 균등한 접근 기회의 보장 논리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이 첨단 산업 기술이므로 우리 나라의 기업 및 출연 연구소의 선별적인 참여 보장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통산성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간의 기술 교역에 관하여서는 가능한 한 개입이나 규제를 억제하고 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내적 요인의 제거와 외적 요인의 개선 등 기술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측에 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간의 대화를 통하여 그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한국 측에 내재하는 요인이라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sup>2)</sup>

##### 나. 현지 연구개발 거점의 설치

일본 기술의 비교 우위를 인정한 구미 기업들은 제품 기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초 기술을 포함한 응용 개발 기술 및 생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본 현지의 연구개발센터를 활발히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일본 현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비용이나 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나 현지 R&D정보의 빠른 흡수, 일본의 기술 풍토에 익숙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 진출이 요구 되어진다. 이 때에 막중한 경비 부담이 따르나 대기업의 경우는 용자,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는 공동 진출의 형태를 취해서라도 현지 R&D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D Center의 설립이나 연구개발형 기업의 M&A와 관련하여 현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일본 개발 은행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고도 기술 집약 단지(Technopolis)나 두뇌 입지 단지, 학원 연구 도시 등의 지역이 기술 접근에 있어 유리하다.

##### 다. 현지 생산의 시도

첨단 소재나 부품의 자체 개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합작으로 일본 내에서의 현지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그 노하우를 한국 내에 확산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일본의 중소기업 중에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나 해외 사업 전개력이 취약하거나 기술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되어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기업을 물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나 노무라종합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물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진출 방식이 결코 회의적이지만은 않다.

##### 라. 휴먼 네트워크의 활용

일본의 기술자, 재일 한국계 기술자를 기술 고문으로서 적극 영입함과 동시에 일본 내 기술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맥을 통한 기술 이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공식적(formal)인 채널로서는 각종 정보 네트워크의 활용, 관련 문헌의 구입, 국제 심포지움이나 학회의 참석,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이나 협력 사업의 참가, 기술 연구생 파견 등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채널보다 비공식적 (informal)인 채널을 통하여 '보다 가치 있는 정보나 기술'을 입수할 수도 있다.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에 비하여 비공식적인 정보 교류의 장(모임)이 보다 활성화 되어 있다. 예컨대 ○○연구회, ○○공부회,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국제간, 학제간, 기업간, 업종간의 정보 교류 및 융합화의 활동을 널리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구성원은 신뢰적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부인에 대하여서는 극히 배타적이므로 인적 네트워크(재일 동포나 유학생 등)의 형성 및 활용 등을 통한 접근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일본과 제3국과의 경합 관계 이용을 통한 교섭력 강화

기술의 획득선을 일본 이외의 국가·지역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국교를 수립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기초 기술 및 국방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의 생산 제조 기술과 접목시킴으로써 기술 선진국(일본)과의 제품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 관계 증진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군수 산업 민수화와 관련하여 양국간에는 기술의 상호 이전 및 합작 투자등의 관계 증진이 기대되며 항공기의 동체와 엔진 기술, 세라믹 등의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정보교류 등의 관계 증진도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 도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 기술 수출 시장에 있어서 기술 선진국 간의 경합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술 이전의 촉진과 기술 도입상의 보다 유리한 조건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설계 기술 등 기초 기술은 타선진국에서 받아들이고 이로써 교섭력을 높여 일본이 앞선 생산 기술을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전략이다. 전자렌지의 핵심 부품인 마그네트론의 경우 일본에서의 기술 도입이 어려웠으나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자 그때까지 기술 이전을 꺼려했던 일본의 M회사가 생산 부문에서의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은 좋은 사례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 내 기업의 경합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일본내 업체 사이에는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업체를 끌어들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일본보다 한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한국 업체와 손을 잡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본 기업 중에 후발 업체는 선발업체가 구축한 진입 장벽을 뚫기 위해 한국 업체에 첨단 기술이나 부품을 제공하면서 이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일본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본내 경합 관계를 잘 이용하면 고급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바. 전략적 기술 제휴에의 참여 확대

일본 기업의 기술 공여 여부는 해당 기업의 국제화 전략, 특히 아시아 전략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일부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특정 분야에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단순 기술 도입의 일방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크로스라이센싱이라든가 상호 비교 우위 분야의 기술 교환 등 한일간에 새로운 패턴의 기술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기술 개발 - 생산 - 판매 등 종합적인 국제화 전략 속에서 기술 이전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고,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기술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동맹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전략 동맹은 주로 일본, EC, 미국간의 이른바 Triad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전자 정보 산업, 생물 공학, 신소재, 정보 화학 등의 분야에서 1980년대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어 개도국의 기술 중심에서의 소외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기업이 이러한 「전략동맹」을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전략 동맹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세계 1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5개社나 차지하고 있다. 세계 첨단 기술의 네트워크상에서 일본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본과의 전략 동맹을 구축하도록 조직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기업간의 여건과 수준에 맞추어 가능하고 타당한 것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삼성 - 후지쯔 및 금성 - 히다찌의 기술 제휴는 한·일 양국간 전략 동맹의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사. 기업의 유형에 따른 기술 협력 방안 강구

한·일 양국간 기업 주체에 의한 기술 협력 방안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업 유형에 따른 협력 채널은 크게 < 표 2> 와 같이 네 가지를 구상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일간 기술 협력의 논의 대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협력 채널이 미약한 II, III, IV에 있어서 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하청 기업중 전속형 하청 기업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협력 채널을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반해 독자적 기술과 자본력을 가진 중간기업 그리고 자본력은 없으나 기술은 뛰어난 벤처 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 채널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 중소기업들 협력 파트너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일본 대기업에의 부품 납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채널이 강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정부는 일본 대기업에 정책적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제·기술적 보완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시 자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의 관계 형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의 중소기업간 협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양국 모두 정부의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체적인 기술 협력 채널의 구축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므로 업종 단체, 대기업,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채널 구축과 함께 시범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 등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한국에 줄 수 있는 기술과 한국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얻고 싶은 기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지원 체제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크다.

V. 맺음말

세계적인 기술 경쟁의 심화에 따라 기술 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 자체도 복합화·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술 이전 및 기술 협력의 패턴은 연구개발·생산·판매가 연계되어 선진국의 소수 기업들간의 전략적 기술 제휴가 주류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보완적 기술 자산을 충분하게 갖지 못한 우리 나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단순한 기술 이전 방식에 의한 기술 획득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보다 다양한 기술 획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한·일간 기술 협력 채널

한국 일본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대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채널 강화</li> <li>◦ 민간 Base(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히 미약</li> <li>◦ 민간 Base(II)</li> </ul>
중 소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채널 구축</li> <li>◦ 민간 Base(II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구축</li> <li>◦ 정부 개입 필요(IV)</li> </ul>

그러나 그 동안 한·일간의 기술 협력 관계에 관한 논의는 기술 이전 그 자체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 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기술을 소화·개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기술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독창적인 기술로 재창조 할 수 있는 자체 기술개발 능력의 제고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심화되는 국제 기술 경쟁 환경에서는 자체 기술 능력없이 더 좋은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교섭력도 갖지 못하게 되며 국제 기술 협력 체제에 끼어들어 갈 수도 없게 된다.

기술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도입된 기술을 독창적인 기술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자체 기술 개발 능력에 의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60년에서 '77년 사이에 도입한 기술 대가의 2배가 넘는 기술 개발비를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 및 추가 연구에 투입한 사실의 의미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영호 외(1993. 2). **한일간 신기술경제 질서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이우광 외(1993. 2). **대일기술획득과 활용을 위한 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강영기 외(1993. 2). **전자산업의 대일기술 의존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주석1) 動向分析研究室, 責任研究員

주석2) 현재 일본측이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지적 소유권의 보호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일본을 겨냥한 각종 규제 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이다. 기술 이전을 수반하는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가 민감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한국측의 투자 환경이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 환경 개선 및 정비가 선결 과제이다.